광주 3년새 무단방치 차량 4200대 '연내 일제정비'나서

광주시, 쓴소리위원회 문제 제안 수용해
시민불편·도시미관저해 해결방안 모색
자동차 매매단지·광주천변·빌라촌 등
상습적으로 버려져…해마다 '증가세'

광주지역 무단방치 차량이 최근 3년 새 4200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연내 일제정비에 나섰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처리된 무단방치 차량은 2018년 1565대, 2019년 1694대, 올해 상반기 956대 등 모두 4200여 대에 달한다.

주로 자동차 매매단지나 빌라촌, 광주천변, 공단 주변에 상습적으로 버려지고 있다.

이들 방치 차량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며 통행 불편은 물론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 쓴소리위원회가 지난 12일 전체 회의에서 방치차량 문제를 공식 의제로 던졌고, 시가 해결방안 모색에 발벗고 나섰다.

시는 12월1일부터 한 달간 도로, 아파트단지,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들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여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 15일 이상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거나 분해,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한 자동차다.

무단방치 자동차가 발견되면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안내문을 통보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할 계획이다.

자동차를 무단방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적발의 90%가 시민신고에 의한 것이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경제난으로 방치된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지만 무심코 버렸다간 사법처리될 수 있는 만큼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미희 기자

전두환 재판정 앞에 설치되는 포토라인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재판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 앞에 포토라인이 만들어 지고 있다. 전씨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경찰, '논문 대필 알선 등 의혹' 광주교대 교수 보강 수사 중

검찰 요청으로 추가 입증 근거 확보해 재송치 방침

경찰이 논문 대필 알선 등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광주교대 모 교수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대학원생에게 논문 대필을 제안하고 심사비 명목의 돈을 요구한 혐의(뇌물수수·사기 등)를 받는 광주교대 모 교수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교수는 올해 초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에게 논문 대필을 제안해 금전 거래를 주선하고, 심사비 명목의 돈을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역 교육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두달 간 관련 수사를 벌여 혐의가인정된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이달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보강 수사를 요청, 사건을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도 마무리 단계다.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갖춰 조만간 검찰에 재송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교수는 '논문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고 심사비는 일종의 관례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성명을 내고 "광주교대에서 연구부정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교수들의 범죄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감시할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공정한 판정 절차를 마련하고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서선옥 기자

스마트팜 혁신밸리 군수 측근 특혜의혹 사실 아니라고 밝혀

고흥군수 및 측근의 이권개입 사실무근…사업 정상 추진 중

고흥군은 최근 한 언론사의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고흥군수 측근 '배불리기?'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019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고, 동년 5월 전남도와 고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추진 지침에 따라 농어촌공사와 사업시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 공사를 위한 토취장은 수탁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전남도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토취장을 고흥군에서 선정하도록 요구하였다.

군에서는 2019년 11월 토취장 선정을 위해 후보지 3개소를 발굴하여 토사량,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군유지 5,132㎡가 인접되어 있는 도덕면 용동리 산 35-1 등 3필지를 적합한 토취장으로 선정하였다.

신모씨 소유인 도양읍 장계리 산 162-1은 토취장 후보지 3개소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고흥군에서는 토취장 선정에서 제외시켰다는 것.

따라서, 2토취장이 군수 측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고흥군에서 선정하였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공사 실시설계 과정에서 혁신밸리 인근 장동 소하천계획 홍수위를 고려한 성토량이 당초 15만㎥에서 24만㎥으로 증가함에 따라 토취장을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신모씨 소유인 장계리 산162-1를 2토취장으로 선정였다.

따라서 2토취장 선정은 고흥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신모씨가 2토취장의 흙 값을 받지 않는 대신 지난 지방선거에서 송군수를 도운 사업자의 덤프 등 장비 사용을 요구하였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흙 값을 받지 않은 2토취장 소유자 신모씨는 고흥덤프연대 소속 회원들로부터 고흥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고흥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듣고 원도급업체 현장대리인에게 개인적으로 그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흥관내 장비를 사용토록 해달라는 덤프연대 소속 회원들은 송군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흙과 예산절감을 위해 3토취장에 대해 고흥군에서 서류조차 접수하지 못하게 했다는 언론보도 내용도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도덕면 용동리 1토취장은 흙 값 문제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흙 절토 후 남은 평지면적을 확보해 달라는 문제로 토취장 개발이 다소 늦어졌으나 지난 20일 최종 협의가 이루어져 토취가 가능한 상태다.

1토취장의 토사량도 당초 10만㎥에서 14만㎥으로 증가함에 따라 충분한 토사량을 확보하게 되어 3토취장 개발은 필요없게 되었고 고흥군에서는 서류신청을 못하게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고흥군 관계자는 "농업의 미래를 바꾸는 정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지난 9월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사실을 왜곡한 언론보도로 군민들의 걱정을 끼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스시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